

지방세도 부자증세... 6500억 세수 증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영세기업·취약계층 지방세 감면 확대... 대기업·고소득층 지방소득세 ↑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영세기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이른바 '부자 증세'를 통해 6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은 먼저 일몰(종료)이 도래하는 46건(5000여억원) 중 창업,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19건을 확대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대상 27건은 종료, 5건의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또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로 확대했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창업(기업 내 일부 사업부서를 임직원에게 이전해 모기업과 다른 독립된 법인형태로 창업) 시 창업 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했다. 창업보육센터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한다.

개정안은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주민세종업원분 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차치단체 내 소재하는 기업의 월 평균 급여총액이 1억3500만원이 넘는 경우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신설당시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 당해연도에 50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도 완화돼 2019년까지 인증 소요 기간에 관계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재산세(대·중소기업 35%, 중소기업 50%)가 감면된다.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산을 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해 해당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기존 취득세 50% 감면 이외에 재산세 50% 감면(5년간)을 신설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한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전국 2800여개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요구에 따라 어업권과 어선에 대한 취득세 뿐만 아니라 육상양식 어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했다. 이밖에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등에 현재 적용하고 있는 취득·재산세 등 감면기간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득층·법인 지방소득세율 10% 상향 조정

정부는 또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조정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했다. '지방세법' 소득세 세율 조정(과표 5억원 초과 40~49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을 4.0%, 4.2%로 조정했다.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과 세율조정(22→25%)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율도 2.2%에서 2.5%로 올렸다.



모두발언하는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제4소회의실에서 열린 과학기술계 원로 및 기관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주주의 주식(3억 초과) 양도소득 세율(20~48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율도 2.0%, 2.5%로 늘어난다. 또 8·2 부동산대책(양도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라 2주택자의 개인지방소득세율은 기본세율+1%p,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p로 조정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변경(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

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도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5.0%로 변경된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해 100억 이상 일몰 도래 감면에 대한 조세전문기관의 사후심층평가 도입, 지방세 감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세 감면 일몰 준비를 통해 2700여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지방소득세 동반 조정(3800여억원)을 통해 모두 60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조배숙 의원, 넥셀론 정상화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 을)이 (주)넥셀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9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박현재 익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에너지지원실장을 만나 최근 법정관리와 상정폐지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주)넥셀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넥셀론은 익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기업인 바, 넥셀론이 파산하게 될 경우 현재 (주)넥셀론에 근무하고 있는 450여명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익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주)넥셀론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및 기업·인수 합병 등을 통한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넥셀론의 생산원가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사용료와 관련하여 납부 방식의 변경 등 산업부와 한전이 (주)넥셀론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용 임곳/웨이퍼 생산에 있어서 국내1위, 세계 8위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넥셀론의 정상화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에너지지원실장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설비의 수요 또한 확대될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처 확대와 R&D 자금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 하겠다" 말했다. 또한 김 실장은 "(주)넥셀론의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전 측과 충분히 협의·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배숙 의원은 "앞으로도 (주)넥셀론 정상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 정부측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익산=정양원 기자

MB장남 이시형, '마약 연루 의혹' 글 올린 박현영·고영태에 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사건 연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올린 박현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박 전 과장과 고영태씨를 상대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다.

박 전 과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고씨로부터 과거에 이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이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과장이 트위터를 통해 과거에 고씨로부터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고 들었다고 유포한 데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으로 이를 유포하는 네티즌에도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KBS '추적 60분'이 지난달 26일 보도한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방송과 관련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달 31일 KBS '추적 60분' 책임 PD 등 제작진 5명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KBS '추적 60분'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해 이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지만 검찰이 박씨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1

정동영 "국민의당, 개혁야당으로 탈바꿈해야"

"따라가면 2중대... 그러나 끌고가면 개혁 주도자... 이것이 당 살리는 길" 주장

국민의당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동영 의원이 "(국민의당은) 어중간한 중간야당에서 선명한 개혁야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 대표 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10일 오전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접수를 마친 뒤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개혁을 주도하자' 강연에 참석해 스스로 생각하는 국민의당의 개혁방안, 비전 등을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때 국민의당이 살아난다"며 "정당은 당원과 리더십으로 구성되는데 국민의당은 당원의 자부심이 떨어져 있다.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게 부끄럽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첫째, 당원 1조를 바꾸겠다. 그 다음날 당헌 개정안 발의하겠다. 내용은 '당원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상황식 당원 민주주의로 바뀌어 당원들의 자부심을 살려나가겠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의 주권주의, 당원 주권론을 국민의당에서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의 핵심 내

용은 방향이다. 동서남북 아닌 어정쩡한 중간은 방향이 없이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기회주의"라며 "국민의당은 동쪽으로 가야 한다. 동쪽으로 가야 해가 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답답한 현실을 바꾸려는 게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 재벌·방송·교육·정치 개혁 과제는 천지뿔갈로 많다"며 "선두에 국민의당이 서는 것, 그래서 국민의당이 개혁을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가면 2중대. 그러나 끌고가면 2중대가 아니라 개혁의 주도자가 된다. 이것이 국민의당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스1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교육 개혁은 교육 고등서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호주동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